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처,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고요. 창작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임으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증세 없는 기본소득, 무조건 불가능한가



이상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증세 없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값싼 납으로 황금을 만들 수 있을까와 비슷한 질문처럼 들린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연금술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역사는 묘해서 연금술과 같은 황당한 시도도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근대 화학 발전의 상당 부분은 연금술 덕이라고 한다.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제 없는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폭넓은 근로장려제, 전국민 고용보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기존 복지제도가 완벽해지는 것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기본소득이라는 연금술 덕분 재정부담이 이루어지고 복지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금액이 무조건적, 정기적,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 조건의 기본소득을 위해선 증세가 필요한 게 자명하다. 그러나 증세 이전에 재정개혁 논쟁이 먼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적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예컨대 연 100만원 기본소득에 필요한 50조원 정도는 증세 없이 가능할까? 경북대 최한수 교수는 지난 〈한겨레〉 칼럼에서 조세감면 축소 등 재정개혁도 기존 수혜자의 반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게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조세

감면 정비 시도가 계속 실패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 루면에 따르면 길이란 것은 원래는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된다고 한다. 연금술이 됐던 기본소득이 됐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 믿게 하고 재정개혁의 길을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 교수는 구체적인 세출 조정 방안을 밝히지 않는 한, 세출 조정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한다. 구체적 항목을 말해보자. 지금도 재정의 칸막이에 갇혀서 놓고 있는 돈이 많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법적 요건으로 정부 돈이 돌지 못하고 갇혀 있는 현상을 재정의 칸막이라고 한다. 흔히들 돈이 없어 걱정이지 많아서 걱정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넘치는 돈을 걱정(?)하는 곳이 많다.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지만 다른 쪽에서는 돈이 넘쳐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기업의 돈을 거둬 초과고용한 기업에 주는 기금이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은 급속도로 늘지만, 초과 고용한 기업은 정체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이 기금의 여유 재원만 1조원에 달한다. 1조원으로 이자놀이만 하고 있다. 아니, 이자놀이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기금법을 바꾸어 서라도 이런 남는 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화발전기금에도 2천억원의 여유 재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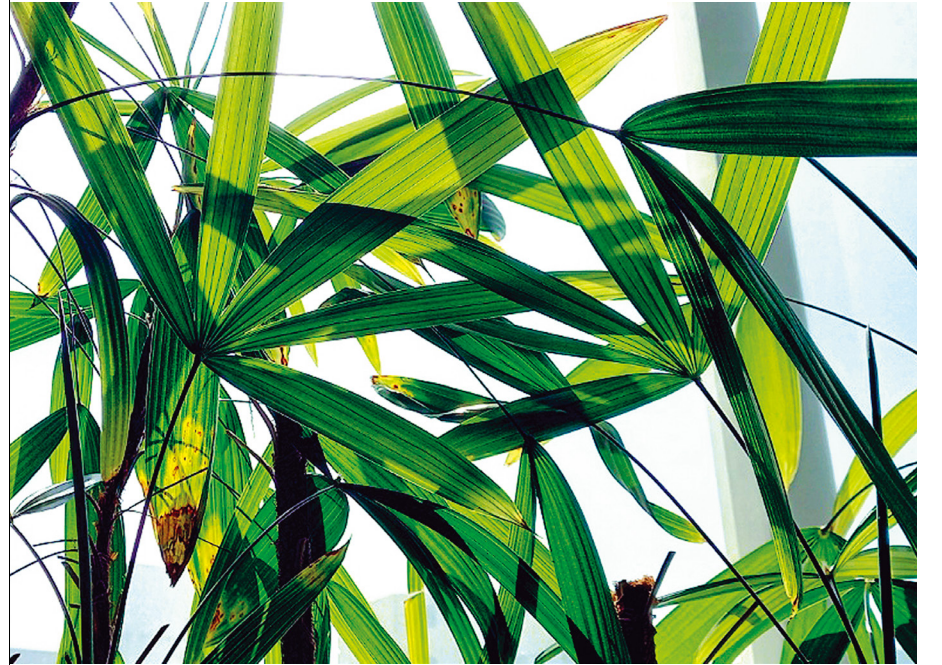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영화인들에게 지출할 재원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애기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있는 1조원의 여유 자금도 일반회계에 전출해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토토라는 국가가 허락한 사행산업의 열매를 해당 기금에서 독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져간 돈을 쓰지도 못하고 '돈맥경화'를 만드는 것은 더 문제다.

나는 기금개혁, 지출구조조정, 조세감면 정비 등 재정개혁 등을 통해 증세 없는 50조원 마련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자신하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한지는 확신 못 한다. 또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보다 앞서 열거한 다수의 기본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재정개혁 시 발생하는 득권을 무마할 힘이 있다. 내가 재정개혁을 통해 50만원 손해 보지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기본소득 반대론자와 기본소득 찬성론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 재정개혁이라는 부산물을 얻을 수도 있다.

연금술의 신인 헤르메스는 “너희들이 바로 신임을 모르느냐?”라고 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은유적 표현이라고 한다. 납 속에 숨어 있는 금처럼 고귀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연금술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속에도 신처럼 고귀한 부분이 있고, 납과 같은 주장에도 황금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포토에세이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닦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이서/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재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김중해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김경호 선임기자 jjae@hani.co.kr

‘학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읽고

교사들의 학교 걱정도 ‘9’입니다



안현우
오산정보교사

문수현 학부모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한겨레〉 2월18일치 왜냐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같은 세대 학부모님 글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격정적인 문구로 끝나는 글을 읽고 나니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쓰립니다.

학부모님, 잠시 숨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한 자릿수 자연수(0을 포함한 음이 아닌 정수)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 세 부류가 뿔어내는 ‘학교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에너지 정도’를 각각 한번 측정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학교 교육에 전혀 무관심한 분들. 이분들 에너지 수치는 당연히 ‘0’이겠지요. 두번째, 코로나 유행병이 퍼지는 와중에 자식 수업 결손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학교 수업을 받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 대부분 학부모님이 해당하셨지만 특히 문수현 학부모님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 때문에 학부모님 에너지는 ‘9’로 측정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국가보안법 7조 철폐” 등등을 외치는 분들, 사실 교단에 서기 전 여러 직업을 경험한 제 눈에 비친 교사는 통념상 지극히 모범생에 가까운 분들이 주축인 곳입니다. 그 때문에 어지간해서 조직 내에서 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님이 언급하신 교원 단체 주장은 확실히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을 대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을 뒤로하고라도 열정이 없다면 힘든 일이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신의 안위만 챙기며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도 말이죠. 이런 면에서 학부모님께서 성토하신 특정 단체에 속해 있는 교사도 학교를 걱정하는 에너지 수치는 ‘9’로 측정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은 앞서 가정할 자연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음수가 있지요. 아니 정수를 넘어서 허수에 사원수(四元數) 이상도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들 주장이 코로나 수업 현실을 외면한 실체가 모호한 허수 같은 소리, 교육에 도움 안 되는 음수 같은 외침으로 들리신 듯합니다.

학부모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 수업 일수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해 겪는 고통과 학부모님이 받는 스트레스를 교사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함께했더라는 자책도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교사도 학교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에너지의 절댓값이 학부모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학부모님은 학교에 분노했는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왜 그 교사들은 그런 주장을 했는가 학부모님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라다면 지나친 욕심이겠지요. 교사와 학부모님 서로 같은 절댓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는 모두가 무기력할 때 아닐까요? “학교는 왜 학원처럼 못 하느냐?”는 질책에 역설적으로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오히려 화만 돌을 듯합니다. 본질적인 대안이 제시된 답변을 기대했다면 죄송하던 말씀입니다.

작년은 어떠한 치료제도 없는 질병이 퍼져나가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학교를 열고 수업을 강행했는데 전염병이 유행했다면 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나마 학교에서 유행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학부모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질에 대해 따져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응급 상황이었다면 작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어 학교 수업이 진행될지 지켜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정한철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후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도 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장동일)와 경기도의회(장 장현국)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고 기후악당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씩씩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한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불양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 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뜻뜻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차별’의 유신 청산해야

‘보상받지 못한 애국선열’의 손자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승화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이다. 독립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한 후 제12조에서 보상 대상인 손자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3년 유신정부가 보상 대상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둘로 나누고 한쪽에 대하여 차별함으로써 48년간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에 이어 12월 유신헌

법 공포 2개월 후인 1973년 2월 유신정부의 국무회의가 보상 대상인 손자녀를 광복 이전 사망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광복 이후 사망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분리해 전자에게만 보상을 100% 지급하면서 후자에게는 보상을 수급권을 빼앗았다.

전자와 후자를 이처럼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00 대 0’의 격차는 반문명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유신정부는 소위 비상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더니 불합리한 차별의 단서조항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1973년 3월10일부터 시작된 ‘3·10 차별’이다.

‘3·10 차별’은 전자와 후자가 국가의 보상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 가계의 손자녀라는 공통성, 전자와 후자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호대상자로서 독립유공자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는 손자녀라는 동일성, 보상 대

상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손자녀라는 동일성을 고려할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3·10 차별은 유신정부에서 만들어진 지 44년이 흐른 2017년 3월11일 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될 때까지 이어졌고 현재의 정부까지 계산하면 48년째 유신잔재로 남아 있다.

유신정부가 1973년 당시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보상을 빼앗았다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 국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뒤라도 보상 예우를 회복시켰어야 함에도 유신정부는 끝내 3·10 차별을 해결하지 않은 채 1979년 붕괴되고 말았다. 유신헌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애국선열 손자녀’ 보상은 사실상 정부의 보상정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회복과 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